



주간 통일정세

2012-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당대표자회 11일 평양서 열린다(종합)(4/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이 제4차 당대표자회를 우리의 총선 당일인 11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북한은 지난 1일까지 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당대표회를 열어 김 부위원장을 당대표자회 대표로 추대하는 등 지역·일꾼 대표 선출을 마쳤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도(정치국), 시(구역), 군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조선인민군, 도 당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4차 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힘.
- **北 공작책임자, 조총련 청년조직 지도(4/2, 산케이신문)**
 - 북한의 대외공작 기관 책임자가 재일 조선총련의 청년 정치조직에 김정은에게 충성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조선총련 산하 정치조직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간부 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탄생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당의 대외공작기관인 225국(구 대외연락부)의 강주일 부장이 "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강연이 아닌 일대일로 개별적으로 교육하라"고 지시함.
- **김정은, 스위스 학교 시절 결석 잦고 적응 못 해(4/2, 르 마탱)**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990년대 스위스에서 2년 동안 다닌 국제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스위스 일간지 '르 마탱'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지난 1일자 일요판에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 시절 첫 해에 75일, 두 번째 해엔 105일을 결석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올해 '4월축전'도 예년보다 대규모(4/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15일)을 맞아 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예년보다 배 이상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일 전함.
 - 조선신보는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1일부터 19일까지 평양



에서 열린다"며 "김 주석 탄생 100돌을 맞는 해에 진행되는 이번 봄 축전은 규모와 내용에서 종전과 많이 차이 난다"고 소개함.

● **北, 청명(淸明)을 공휴일로 정한 듯(4/4, 연합뉴스)**

- 북한이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淸明)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연합뉴스가 전함.
- 청명인 4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조선중앙TV는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가끔 낮 12시 또는 오후 3시부터 방송을 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 방송을 시작하였고,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기사를 한 건도 타전하지 않고 있음.

● **김정은, 美 '푸에블로'호 나포 해군부대 시찰(4/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인민군 해군 155군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곳 군부대는 김일성 동지께서 27차례, 김정일 장군님께서 29차례 다녀가신 부대"라며 "(김 부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6·25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하고 평화시기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해 세상을 놀래운 군부대의 자랑찬 군공을 평가했다"고 소개함.
- 김 부위원장의 해군부대 시찰에는 김원홍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 대장, 리두성, 리종무 중장 등이 수행

● **北 '강성국가' 상징 자강도 희천발전소 완공(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의 상징'으로 강조해온 자강도 희천발전소(수력발전소)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통신은 "희천1호발전소와 희천2호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각각 진행됐다"며 "건설자들은 10년 이상 걸려야 한다던 발전소 건설을 단 3년 동안에 끝냈다"고 밝혔다.
- 청천강 상류에 있는 이 발전소는 유역변경식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30만k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3월 착공됐지만 2009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설현장을 처음 찾아 '강성대국 원년인 2012년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사속도가 빨라졌음.
-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유훈사업'으로 간주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매진해왔음.
-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태종수 노동당 비서 등이 참석

● **김일성 100회 생일맞아 北 곳곳서 준공식(종합)(4/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그이(김정일)의 최대의 목표는 수령님(김일성) 탄생 100돌이 되는



-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것이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2월12일자에 실린 글이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것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셈인.
 - 북한은 '강성국가 선포'를 위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와 함께 전역에서 발전소, 주택, 공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완공을 서둘러 왔음.
 - 북한은 또 개성시 박연폭포 주변 천연바위에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 수령님 탄생 100돌 기념, 2012년 4월15일'이라는 대형문구를 새겨넣었다. 한 글자의 높이가 4~5m이고 총 길이는 37m에 달하는 이 '기념 글밭' 준공식도 5일에 열렸음.
 - 노동신문은 8일 "평양시 일꾼들이 수령님 탄생 100돌을 맞으며 만경대 혁명사적지를 더욱 훌륭히 꾸렸다"며 "(만경대 생가 주변의) 남리부락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러졌으며 만경대유희장도 봉사준비를 끝냈다"고 전했다. 김 주석 생가 주변 리모델링이 사실상 완공됐음을 뜻함.
 -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며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한 개 군 면적과 맞먹는 부침 땅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양어와 양식도 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소개
 - 또 조선중앙방송은 5일 "수도(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바닷물 공급소로부터 시 안의 각 수원지와 중앙동물원 수족관, 능라도에 일떠서는 곱둥어(돌고래)관까지 바닷물 수송관을 모두 연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됐다"고 소개
 - 그 전날 노동신문은 "618시멘트공장이 3일 준공됐다"며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과 4차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노력적 선물"이라고 소개

● 北지도부 만경대 김일성 생가 방문(4/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고위간부들이 8일 김 주석 생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에 즈음해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과 당, 근로단체, 성기관 일꾼들이 8일 만경대(김 주석 생가)를 방문했다"며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은 만경대 옛 집 방문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 김정은 동향

- 4/2, 김정은 부위원장, 자강도 전천군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에게 70회 생일상(4.2, 중통)
- 4/4, 김정은 부위원장, 동해안전방초소 려도방어대 시찰(4.4, 중·평방·중통)
 - 김원홍·현철해(대장)·리두성·리종무(중장) 등 동행
- 4/6,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4.6, 중통·중방)
 - 김원홍·현철해(대장들), 이두성·이조우(중장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을 △유훈 관철, △제4차 당대표자회(4.11)를 계기로 김정은 영도체계 확립, △'광명성-3호'의 성과적 발사, △대상공사 완공으로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민족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자'고 독려(4.3, 중통·노동신문/사설, 아버지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민족사적 대경사로 맞이하자)
- '제4차 당 대표자회는 혁명과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김정은 동지의 힘찬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고 선동(4.5, 중통·노동신문·중방/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뜻깊게 맞이하자)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19돌 관련 동정
 -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연구토론회, 4.5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4.5, 중통)
 -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 4.5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진행(4.5, 중통·중방)
 -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4.5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4.5, 중통·중방)
- 北, 4.5 '세계보건의 날' 행사 평양에서 진행(4.5, 중통·평방)
- 김일성 주석 생일(4.15) 관련 동정
 -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4.3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4.3, 중통)
 -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 기념 국제축전 선전화 제작(4.3, 중통)
 - 김정일 저작(인민대학습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며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다) 발표 5돌 기념 연구토론회, 4.3 평양에서 진행(4.3, 중통)
 - 北, 주체사상세계대회 선전화들 제작(4.5, 중통·평방)
 - 인민소비품전시회, 4.5 평양에서 개막(4.5, 중통)
 - 중화유상연합회 중화유상총상회,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4.5, 중통·평방)



- 희천1호, 2호발전소 준공식, 4.5 최영림(내각총리/준공사) 참가下 各 各 各 진행(4.6, 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4.1), △ 희천발전소 설계에 김일성상 수여 △ 완공에 기여한 5만 7,872명의 군인, 건설자, 일꾼들, 설계가들에게 표창 △ 건설자 7만 8,339명에게 희천발전소건설기념메달 수여(4.6, 중통·중방)
- 김일성 주석 생일(4.15) 100돌 관련 동정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일(1993.4.7) 즈음 조국통일 업적 선전(4.6, 중통)
 - 김일성의 영화촬영거리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4.5 진행(4.6, 중방)
 - 전국 태권도축전 개막식, 4.6 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 참가하 태권도전당에서 진행(4.6, 중통)
 - 영화상영순간 개막식, 4.6 김기남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6, 중통)
 - 국가우표발행국, 김 주석 생일 기념 우표 발행(4.6, 중통)
 - 도서 '불세출의 위인 김일성 동지' 전5권 출판(4.6, 중통)
 - 김영남·최영림·이영호를 비롯한 당·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4.8 만경대 방문(4.8, 중통)
 -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들 출판(4.8, 중통)
- '광명성-3호' 발사 등 "우리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문을 연다"며 김정은의 "조선의 전진속도는 천리마에 우주를 더한 광명성속도로 될 것"이라고 강조(4.7, 중방·노동신문/정론, 이 조선 무궁 강대하라)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3.29 김정일 위원장에게 '김일성훈장'(정령 제2290호)과 '김일성상'(정령 제2291호)을 수여(4.9, 중통·중방)

나. 경제

- 美대북지원 절반 이상 식량..약 8억 달러어치<CRS>(4/2, 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375만 달러(약 1조4천870억 원)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9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 항목별로는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 달러(225만8천164t)로 전체의 53.9%를 차지,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3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90만 달러가



각각 투입됨.

● EU, 북한 고려항공 유럽 운항제한 조치 유지(4/3, 연합뉴스)

- EU 집행위는 3일 발표한 '유럽 항공사 안전 명단' 19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附則) B'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사 명단에 종전처럼 포함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EU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평가해 전면적으로 취항을 금지하는 '부칙 A' 등급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부칙 B' 등급 항공사로 각각 나눠 규제하고 있는데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가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부칙 A등급'을 받아 오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으로 '부칙 B 등급'을 받음.
- 이번 개정에서도 '부칙 B등급'을 받음에 따라 고려항공의 항공기 가운데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EU 회원국 취항이 금지됨.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수출입 금지(4/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 입출항도 금지됨.

● 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석 달 연장(4/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3월 만료 예정이던 대북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7월부터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힘.

● 北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4/8, 조선중앙통신)

- 지난 2일 오전 3시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에 눈이 많이 내려 적설량이 16~24cm에 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 통신은 지난 6일 "최근 조선의 전반적 지방에서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센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저온현상이 지속되면 올해 농업생산에 후과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음.



다. 군사

● 北, 오는 15일 군사퍼레이드 예정(4/3, 교도통신)

- 북한은 로켓 발사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당초 계획했던 북한군 창설 80주년 기념일인 4월 25일에서 앞당겨 1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
- 이 통신은 "한 국방 무관이 4월 25일로 예정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평양 당국으로부터 일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 통신은 북한이 군사 퍼레이드 일정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유럽 및 여타 국가 외교관과 국방 무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지지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군사 퍼레이드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 北 미사일, 주말 발사대 설치 완료(4/6, 아사히TV)

- 북한이 이번 주말까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대 설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일본의 아사히TV가 6일 보도
- 이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으며, 방송은 "주말에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주 초부터 본격적인 발사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보도
- 니혼TV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3단 로켓 가운데 1단을 발사대에 이미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이 방송은 위성 분석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이후의 발사를 위해 북한이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 北, 장거리로켓 3단계 장착 모두 완료(종합2보)(4/8, 연합뉴스)

-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의 1~3단계 추진체와 탑재물 장착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북한은 이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오늘 1~3단계 추진체는 물론이고 추진체 위에 올릴 탑재물까지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추진체 결합부에 대한 고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르면 9일부터 연료 주입에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연료 주입이 2~3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12~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음.



라. 사회·문화

- **김일성 생일 전후 중국인 평양관광 잠정중단(4/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중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는 4월15일(김일성 생일) 전후로 중국인의 평양 단체관광이 잠정 중단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중국 단둥(丹東)의 금향선국제여행사 등 중국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일정의 북한 단체관광이 중단된다고 밝힘.
 - 홍콩의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전함.

- **北 황해남도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 속출(4/4, 좋은벗들)**
 - 북한의 황해남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4일 전함.
 - 이 단체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9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폭우로 홍수피해를 본 황해남도는 농작물 수확량이 전년보다 급감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사에 따른 100일 애도기간에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 아사자가 나오고 있음.
 - 소식지는 황해남도 도당 책임비서 등이 중앙당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식량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는데 황해남도의 한 당 간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대표들에게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식품이면 다 된다'고 긴급지원을 요청했다"며 급박한 식량 상황을 알림.

- **北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우표 발행(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우표발행국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 기념우표는 묶음전지 1종, 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으로 이뤄졌으며, 묶음전지는 김주석의 초상화와 부인 김정숙과 함께 한 모습을 형상화한 미술작품을 편집했고, 소형전지는 만경대 고향집을 배경으로 김 주석 부부를 담았음.

- **학생 달랑 한명...북한의 '초미니학교'(4/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학생이 한 명인 학교가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으며, 통신이 소개한 학교는 평안북도 앞바다의 수운도분교(分校)로 학생 수가 달랑 한 명, 인근의 랫도분교도 학생 수가 두 명뿐임.
 - 통신은 "신의주로부터 뱃길로 멀리 가야 하는 이곳 두 섬에는 등대원과 그의 자녀가 살고 있다"며 "나라에서는 수운도에 있는 한 명의 학생과 랫도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을 위해 독립적인 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교들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음.
 - 통신은 "교구비품과 직관물, 동식물표본 등 교수교양수단들을 잘 갖춘



소학교 분교들에서는 물에서와 똑같이 개학모임과 졸업식이 진행돼 온 나라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며 새 학기(4월)를 맞아 북한의 교육 정책을 자랑했음.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 추대(4.9) 19돌 즈음 기록영화 '선군혁명 영도로 전환을 마련하시어', 4.7 김영남 · 최영림 등 관람下 인민문 화궁전에서 상영(4.7, 중통 · 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美와 비공식 협의서 미사일 발사 교수(4/2, NHK)

- 일본의 NHK방송은 북한과 미국이 독일에서 접촉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급히지 않았다고 2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독일 동부의 한 도시에서 열린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공식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에서는 리 근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에서는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이 참석 했다고 전함.
- 방송에 의하면 이번 접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측은 북한의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美, 北에 '위성발사 中 · 러에 의뢰' 제안(종합)(4/2, 아사히TV)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일본의 아사히TV가 2일 보도함.
- 이 방송에 의하면 독일에서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한 미국 측이 다음 달 12~16일 사이 발사가 예고된 위성에 대해 "북한이 어디까지나 위성 이라고 주장한다면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뢰하는 게 어떻겠냐"라 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함.
- 미국 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경우 6자 회담 재개와 식량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음.

● 아세안 정상회의 3일 개막...北로켓 등 논의(종합)(4/3, AP통신)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이 틀 일정으로 개막되어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인구 6억 명을 거느린 '아시아판



- 유럽연합(EU)' 출범을 위한 제반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전함.
- 수린 피츠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일 AP통신에 일부 정상들이 이달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로켓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함.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수출입 금지(4/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 입출항도 금지됨.
 - **日, 北 위성발사 참관 요청 거부(4/3, 교도통신)**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청장을 보낸 것과 관련 "참석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JAXA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그는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 북한 입국의 자숙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함.
 - **比, 北로켓 발사 대비 루손섬 일대 '비행금지'(4/3, 연합뉴스)**
 - 필리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루손섬 동부해역에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금지키로 했다고 베니토 라모스 민방위청장이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日, 北 위성발사땀 유엔에 추가제재 요청 검토(4/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미사일 실험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외교 포위망을 강화하기로 함.
 - **아세안 정상들, 北로켓 당사국 자제 촉구(종합3보)(4/4, AFP)**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20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낸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함.
 - 성명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6자 회담을 조기에 개최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에 관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발사행위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1874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 **美 "국제사회에 北위성발사 참관거부 촉구"(4/5,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국제 사회에 참관단 파견 등 어떤 대응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참관 초청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어떤 참관단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함.

● **北조평통 "평양타격 맨 비참한 파멸 안길 것"(4/5,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일 우리 군의 '평양 보복타격'과 '광명성 3호 위성' 요격 발언과 관련, "무모한 군사적 도발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남조선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발사를 걸고 요격이니 뭐니 하며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괴뢰군부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기습공격'과 '도발 가능성'을 운운하며 '상응표적 타격계획'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평양타격' 폭언을 쫓아대고 있다"고 비난함.

● **美 "北미사일 발사 태세 면밀 감시중"(4/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함.

● **재일민단, 北 위성발사 중단 요구 시위(4/6, 연합뉴스)**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이 6일 오전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재일민단과 산하 부인회, 청년회의 간부 약 4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도쿄 시내에 있는 조선총련 중앙본부 앞에서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광명성 3호의 발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 재일민단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여서 재일 한국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日 "北 핵·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에 위협"(4/6, 연합뉴스)**

 -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 활동과 방향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교청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
 - 북한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경제면에서 여전히 어렵고, 도발 행위에 의해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김정은 체제에 대해 "예단을 불허한다"면서 "향후 주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 **北 "광명성 3호 취재차 외신기자들 방북"(4/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참관, 취재하려고 여러 나라의 방송, 통신, 신문기자들이 6~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통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초청으로 미국의 AP통신과 CNN, NBC, 일본 교토통신과 NHK, 프랑스 AFP통신, 영국 로이터통신과 BBC, 독일 ARD, 스웨덴 STV방송, 스위스 RTS방송, 베트남 중앙TV 방송, 남아프리카의 ETV방송 등의 기자들이 평양을 찾았다고 밝혔다.
 - 북한은 지난달 17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시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정부 차원의 전문가 파견을 거부했다.

- **日방위성, 北미사일 낙하편 80% 이상 요격 확신(4/8, NHK방송)**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 명중률 80% 이상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8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渡邊 周) 부대신(차관)은 7일 방문지인 오키나와(沖縄)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의 요격 태세와 관련 "명중률 80%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 일대와 수도권의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 등 3개 해역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 **北, 작년 여름부터 인공위성 발사 주장(4/8, 아사히신문)**

 - 미국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작년 여름부터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



한이 핵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를 본격화한 작년 여름부터 북한은 '국가의 권리'로서 인공위성 발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음.

- 리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퇴직한 뒤에도 북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계속해왔음.

● 日 "北, 납치자 송환엔 책임 안묻겠다"(4/8, 아사히신문)

- 일본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중국에 일본인 피랍자를 송환할 경우 김정은 체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작년 12월 하순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와 회담하면서 이런 의사를 표명했음.

● 日, 北 미사일 발미 '은근슬쩍' 무장 강화(4/8,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발미로 은근슬쩍 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오키나와(沖縄)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등 동중국해 쪽의 군사력을 보강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있는 동중국해의 방위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中,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위반 인식 불투명(4/8, NHK방송)

- 일본 언론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 NHK방송은 8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임 이사국인 중국도 각국과 보조를 함께해 북한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기타 (대외 일반)

- '한국전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계속 진행중이고 北은 힘으로 미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며 평화협정(美北교섭, 6자회담)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 및 '한반도 비핵화와 美北관계 정상화, 통일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이 목표'라고 강조(4.2, 조선신보/조선전쟁은 계속중)
- '광명성-3호' 발사 발표 후 '미국의 도전적 행동(결의 위반, 이지스함 출동 등)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4.6, 중통·노동신문/새전쟁 도발을 노린 무모한 망동)
- '광명성-3호' 발사 참관·취재를 위한 미국 AP통신과 CNN·NBC 방송 및 일본 교도통신·NHK방송 등 외신기자들, 4.6-7 평양 도착 보도(4.7, 중통·중·평방)
- 日 '2012외교청서'에 수록된 '독도영유권' 주장 책동은 '南보수집권 세력의 친인매국행위와 對日저자세외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의 단호한 심판 촉구(4.8, 우리민족끼리/각성을 촉구하는 독도강탈책동)
- 여러 나라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 4.8 서해 위성발사장 참관(4.8, 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IAEA "北에 핵사찰 추가정보 요청"(4/3, 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핵사찰 초청과 관련, 방북 이전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레그 웹 IAEA 대변인은 이날 "IAEA는 지난달 30일 북한에 (초청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며 방북 시기와 방북단의 구성 및 격(格), 기술적인 문제 등이 방북 이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함.
- 웹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이 핵사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무조건 비행기에 올라타서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적절한 준비작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함.

● 日 6자대표 "北로켓 대응 비상조치 논의"(4/3, 연합뉴스)

-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장거리로켓 발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단행할 '비상조치(contingency measures)'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대표인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글



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혀 사실상 이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미 당국자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北 '광명성 발사' 제재시 3차 핵실험 시사(4/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비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조미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리농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 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함.

● **北, 로켓 발사 뒤 3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4/8,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2~16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 뒤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영상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외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 실제로 지난 1일 촬영된 美 상업위성인 '퀵버드' 촬영 영상을 보면 풍계리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됐으며, 이 토사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지난달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日방위성 차관 "北 미사일 발사 뒤 핵실험 가능성"(4/8, 후지TV; 마이니치신문)**

- 일본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방위성 부대신(차관)이 8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후지TV에 의하면 와타나베 부대신은 이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도 실시했다"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라면 어떨 것이냐를 보여줌으로써 체제 유지를 주변국이 인정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유엔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오는 12일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에서 긴급 비난 성명 채택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기타 (6자회담(북핵))

-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며 韓美日 등 유관국들의 발사 문제제기時(식량지원 중단, 요격 등) '핵시험 등 강경대응 불사' 표명(4.4, 조선신보/광명성-3호, 초점은 발사 후 유관국들의 행동)
 - 조미합의(*식량지원 등)가 깨지면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음.

3. 대남정세

● 北민화협 "박근혜패당 총선거 심판해야"(4/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6일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와 그 패거리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 역적패당을 기어이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화협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박근혜는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 제 입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 화해, 협력을 운운하며 마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듯이 수선을 떨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까지 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의 방북 당시 발언을 전했다.

● 李대통령, 美 공화당 정보특위의원단 접견(4/6,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북·미 2·29 합의'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안보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 기타 (대남)

- 「조평통」 서기국 백서(4.2), '이○○패당이 남북관계 파탄과 정세 악화의 책임을 넘겨씌우고 대결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있다'고 비난하며 '최고존엄까지 모독한 역적패당과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4.2, 중통)
 - '북남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대결집단' 題下로도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의 장애가 조성된 데 대한 책임 전가(4.2, 우리민족끼리)
- 우리 정부의 '北 위성 발사는 합의 위반'(중대 도발, 미사일 발사설 등) 언급을 '남북대결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 「총선」 정세를 역전 시키려는 행위'라고 비난 지속(4.3, 중통·노동신문/본전도 찾지 못할 양탈질)
- 「조평통」 대변인 담화, 4.5 국방부장관의 '서울이 공격받으면 평양을 보복타격', '광명성-3호 요격' 발언에 대해 '위성발사체 잔해물에 대한 요격과 회수놀음을 벌린다면 즉시 무자비하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4.5, 중통·평방)
-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4.6 '남북간 인도주의 사업 파탄 책임 전가' 상보 발표(4.6, 중통)
-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의 '北 장거리 로켓 발사는 계산된 전술' 발언을 비난하며 '아무리 反北 적대세력들이 모지름을 써도 우리의 위성은 우주를 치똥게 될 것'이라고 엄포(4.6, 우리민족끼리/쥐굴에 숨어있는 산 송장의 비명소리)
- 北 '조국통일연구원', 4.7 언론들과 인터넷상의 우리 정부 여당의 정치·경제문제와 외교 및 對北정책 등 비판 글 등을 발췌 "남조선민심백서"라고 발표 선동(4.7,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광명성 발사' 제재시 3차 핵실험 시사(4/4)

- 북한은 4일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응해 미국 등이 유엔을 동원해 제재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도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나 같다"며 "2009년 5월에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서 두 번째의 핵실험을 단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위협한 셈임.
-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유엔 핵사찰단을 추방하고 6자회담을 거부, 그해 5월에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음. 조선신보는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북미)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며 "조미 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기로 한 조선 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했음.
- 신문은 또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 발사 당시를 거론, "3년 전 일본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시비하면서 요격 소동을 벌였을 때 '반타격사령관'으로 육해공군을 지휘한 분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라며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했었다"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했음. 조선신보는 "조선은 강성국가 건설의 시간표에 따라 위성발사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일부 나라들이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조선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에서 이미 발표한 계획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음.

● 日방위성 차관 "北 미사일 발사 뒤 핵실험 가능성"(4/8)

- 일본의 외타나베 슈(渡邊周) 방위성 부대신(차관)이 8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후지TV에 의하면 외타나베 부대신은 이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실험도 실시했다"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의도와 관련 "인공위성이 아니라 핵탄두라면 어떤 것이냐를 보여줌으로써 체제 유지를 주변국이 인정토록 하려는 것



- "이라고 분석했음.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유엔에서 일본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음.
-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오는 12일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에서 긴급 비난 성명 채택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음. G8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주도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 겐바 외무상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G8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주도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北, 로켓발사 뒤 3차 핵실험 강행할 듯"(종합)(4/8)

- 북한이 오는 12~16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음.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과거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최근 촬영된 상업위성영상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 기존 2개의 핵실험갱도 외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음.
- 실제로 지난 1일 촬영된 美 상업위성인 '퀵버드' 촬영 영상을 보면 풍계리 갱도 입구에서 토사더미가 식별됐으며 이 토사는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지난달부터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과거 북한이 핵실험 직전 마지막 준비작업으로 갱도를 토사로 되메우기 해 왔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임.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3개월 뒤인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1개월 뒤인 5월 제 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1단계 추진체를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음. 북한은 평양 인근의 신음동 로켓 연구소에서 제작한 부품을 지난달 23일 동창리 기지로 옮겼으며, 10여일간 건물 안에서 추진체 점검과 함께 1~3단계 추진체에 대한 최종 조립을 마쳤음.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기 위한 발사체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며, 기상상태를 고려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5일 전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게 정보당국의 전망임.
- 정부 당국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실시를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는 그들의 소위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北-美, 베를린서 비공식 접촉"(4/2)

-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미국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가 1일 밝혔다. 아스펜 연구소의 베를린 지부장 찰스 킹 멀로리는 이날 '트랙 2' 로 불리는 북미 간 비공식 대화가 주말에 열렸다고 전했다. 멀로리 지부장은 북미 대화의 내용과 누가 참석했는지에 관해 선 언급을 회피했다.
- 아스펜 연구소는 작년에도 독일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만남을 주선했음. 하지만 당시 접촉에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참석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음. 북한은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국제 세미나에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을 보내 미국 측 전직 고위관리들과 접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의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등이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 리근 국장은 독일로 떠나기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북한은 4월 중순에 관측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美, 北에 '위성발사 中·러에 의뢰' 제안"(종합)(4/2)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일본의 아사히TV가 2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의하면 독일에서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한 미국 측이 다음 달 12~16일 사이 발사가 예고된 위성에 대해 "북한이 어디까지나 위성이라고 주장한다면 발사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다.
-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 측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경우 6자 회담 재개와 식량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방송은 이번 북미 접촉에 북한은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미국에서는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 한편 NHK 방송은 독일 동부의 한 도시에서 열린 이번 북미 접촉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의하면 이번 접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양측은 북한의 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송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자단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독일의 연구자는 "북한이 발사를 중단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었다"면서 "북한



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인물은 최고지도자 외에는 없는 만큼 (북한의 생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의 베를린 지부장 찰스 킹 멀로리는 '트랙 2'로 불리는 북미 간 비공식 대화가 지난 주말에 열렸다고 밝혔다. 아스펜 연구소는 작년에도 독일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만남을 주선했으며 당시 접촉에도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참석했었다.

● 美대북지원 절반 이상 식량..약 8억 달러어치<CRS>(4/2)

-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천375만 달러(약 1조4천870억 원)로 집계됐다.
-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9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 달러(225만8천164t)로 전체의 53.9%를 차지,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대해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에는 3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또 6자회담 합의에 따라 1억4천600만 달러 상당의 중유가 지원됐고,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EDO) 관련 비용으로 4억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에 1천90만 달러가 각각 투입됐다.
- CRS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윤일(閏日·Leap day·2월 29일) 합의'로 최근 1년여 논의된 대북 식량지원 문제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발표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아울러 현지 모니터링의 한계로 인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미국 정부에 '딜레마'라고 지적했음.
- CRS는 그러면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 등 안보관련 협상과의 연계 ▲모니터링 개선 문제와의 연계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 ▲중국에 대한 대북식량지원 모니터링 개선 촉구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음.
- 보고서는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경우 2011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관련 예산이나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 기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RS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비핵화 관련 예산의 경우 2011, 2012,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모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美 "北미사일 발사 태세 면밀 감시중"(4/6)

-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우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는 오는 12~16일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앞두고 군(軍)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를 추적·감시하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합의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카니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이전에 논의됐던 영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도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서울(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측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획을 바꿔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음.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경고'에 대해 "추측은 않겠다"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위성 발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음.
- 한편 CNN방송은 이날 미국 관측위성 영상제공업체인 지오아이가 지난 달 3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동창리의 로켓발사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음. 국방 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앨리스 푸치니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발사대의 정비탑 방향이 바뀌었다"면서 "아울러 주변에 차량 등이 늘어났다"고 말했음. 그는 아울러 미사일 조립 건물 인근에서 도로 포장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중장비의 이동이나 중요 인사의 방문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 일·북 관계

● 北, 위성 발사에 日 우주항공개발기구 초청(4/2)

- 북한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청장을 보냈다고 아사히TV가 2일 보도했음. 이 방송에 의하면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오는 12~16일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JAXA에 초청장을 보냈음.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초청장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실황으로 견학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간담회도 가능하다"고 밝혔음. 북한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참가 여부를 내부 협의 중임.
- 아사히TV는 북한이 각국 전문가를 초청함으로써 위성 발사가 미사일



실험이라는 국제적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日, 대북 제재 1년 연장...수출입 금지(4/3)**

- 일본 정부가 수출입 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했음. 일본 정부는 3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북한 선적의 모든 선박 입출항도 금지됨.
-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연장은 여덟 번째며, 노다 내각 들어서는 처음임.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독자적인 제재를 시작했음.

● **日, 北 위성발사 참관 요청 거부(4/3)**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 참관 요청을 거부했음. 3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청장을 보낸 것과 관련 "참석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JAXA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 북한 입국의 지속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에 따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북한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오는 12~16일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 JAXA에 "인공위성 발사를 실행으로 견학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간담회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음.

● **"日, 北 위성발사편 유엔에 추가제재 요청 검토"(4/4)**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실상의 미사일 실험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독자 제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외교 포위망을 강화하기로 했음.
-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과 관련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유효한 수단을 긴박감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곧바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방침임.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로에 오키나와(沖縄)가 걸려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위협을 받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외무성 간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각국에 제안해 의견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고 말했음.



● 北, 4월15일 행사에 日 인사 20여명 초청(4/5)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일본 인사 20여 명을 초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에 60여 개국에서 수백 명을 초청했으며, 일본 인사는 20여 명이라고 전했음. 북한을 방문하는 일본 인사 가운데는 단장을 맡을 전 사민당 참의원 의원인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씨와 전 프로레슬러인 안토니오 이노키 씨 등이 포함됐음.
- 하지만, 이들은 초청장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알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에 집결해 북한 대사관에서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북한에는 1주 정도 체류함.
- 한편,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선총련)는 이번 행사 때 평양시내에 약 150개의 야외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임. 이번 행사를 맞아 북한이 조선총련과 북한 출신의 재일 상공인들에게 10억 엔(약 137억 원)의 현금을 요구했다는 정보가 있어 일본 공안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 日, 北 위성 발사 대비 패트리엇 배치 완료(4/7)

-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육지와 섬 등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음. 7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날 새벽 도쿄 시내 이치가야(市谷)에 있는 방위성과 사 이타마현의 육상자위대 아사가스미 훈련장, 지바현의 나라시노 훈련장 등 수도권 3곳에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음. 방위성 내에는 2대의 패트리엇 발사기가 북서 상공을 향해 설치됐음.
- 앞서 지난 3일에는 오키나와(沖縄) 본섬 2개소와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지마 등 멀리 떨어진 섬 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음. 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3척도 이날 아침 배치 해역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으로 출항했음.
-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위성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우선 대기권 밖에서 SM3가 요격에 나선 뒤 실패할 경우 지상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이 격추에 나서는 2단계 요격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

● 日 "北, 납치자 송환엔 책임 안묻겠다"(4/8)

- 일본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중국에 일본인 피랍자를 송환할 경우 김정은 체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작년 12월 허순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와 회담하면서 이런 의사를 표명했음.
- 당시 야마구치 부대신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피해자들이 귀국한다면 김정은은 신체제에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음. 그는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 납치 피



해자에 대한 재조사 실시와 조기 귀국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에 의하면 야마구치 부대신은 우다웨이와의 회담 내용을 사전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귀국 후 총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일본과 북한의 납치자 문제 협의는 2008년 8월 이후 중단됐음. 따라서 야마구치 부대신의 발언은 북한의 체제 이행기를 계기로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日방위성 "北미사일 낙하뎀 80% 이상 요격 확신"(4/8)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 명중률 80% 이상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8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부대신(차관)은 7일 방문지인 오키나와(沖縄)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낙하할 경우의 요격 태세와 관련 "명중률 80%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 일대와 수도권의 7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동중국해와 한국의 동해 쪽 등 3개 해역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와타나베 부대신은 자위대 부대가 있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를 방문해 요격 미사일 배치 상황을 시찰한 자리에서 "지금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 오키나와 주변의 섬들)를 지키는 것은 자위대원 외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임무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 그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명중률이 80%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오키나와) 지역의 관광사업에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키나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동중국해인 난세이(南西)제도의 자위대 배치를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경계감을 의식해 자치단체의 대표를 만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자위대의 대응에 이해를 구했다.

라. 러·북 관계

● 북한 주재 신임 러시아 대사에 티모닌 특명대사(4/6)

- 북한 주재 신임 러시아 대사로 알렉산드르 티모닌 외교부 특명대사가 임명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발레리 수히닌 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경질하고 티모닌 특명대사를 신임 대사로 임명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티모닌 신임 대사는 지금까지 러시아 외교부 본부에서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특명대사로 일해왔다.



마. 기 타

● 아세안, 北 미사일 발사계획에 우려 표명(4/2)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음. 수린 피추안 아세안 사무총장은 1일 아세안-유럽연합(EU) 실무 정상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역내의 군비경쟁과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아세안 역내 교역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피추안 사무총장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일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에 앞서 필리핀 외교부는 유엔과 중국, 아세안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항의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음.

● EU, 북한 고려항공 유럽 운항제한 조치 유지(4/3)

- 유럽연합(EU)은 3일 북한의 고려항공에 대한 EU 역내 운항 제한 조치를 유지했음.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유럽 항공사 안전 명단' 19차 개정판에서 고려항공을 '부칙(附則) B'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사 명단에 종전처럼 포함시켰음. EU는 유럽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평가해 전면적으로 취항을 금지하는 '부칙 A' 등급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부칙 B' 등급 항공사로 각각 나눠 규제하고 있음.
-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EU가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부칙 A등급'을 받아 오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으로 '부칙 B 등급'을 받았음. 이번 개정에서도 '부칙 B등급'을 받음에 따라 고려항공의 항공기 가운데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EU 회원국 취항이 금지됨. 고려항공은 보유 항공기 20여 대 가운데 10여 대를 운항 중인데 최근 구입한 2대 외에는 모두 1960~70년대에 제작된 옛 소련제 항공기로 알려져 있음.
- EU의 19차 개정판에선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콩고공화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21개 국, 279개 항공사와 기타 5개 독립 항공사 등이 전면 운항 금지에 해당하는 '부칙 A등급'을 받았음. 또 고려항공과 함께 요르단 항공, 카자흐스탄의 에어 아스타나 등 11개 항공사는 '부칙 B등급'으로 평가받았음.
- '유럽 항공사 안전 명단' 작성에는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27개 EU 회원국은 물론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등 비(非)EU 국가의 항공안전 당국지들도 참가함. 명단 개정은 만장일치제로 이뤄지며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의 18차 개정 이후 이어 나온 것임.

● 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석달 연장(4/4)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3월 만료 예정이던 대북 긴급식량지원



-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7월부터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북한 주민 210만여 명에게 약 1만3천t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분이 함유된 혼합식량(blended foods)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 아세안 정상들, 北로켓 당사국 자제 촉구(종합3보)(4/4)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해 당사국들에 자제를 촉구하는 등의 공동성명을 끝으로 폐막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들 일정의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을 둘러싼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상들은 또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발사행위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1874호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성명은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6자 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앞서 호르 남흥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가 의장국이라는 자격 외에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 아세안 정상들은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은 분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의 기본 방향에 따라 DOC를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정상들은 이어 미얀마가 최근 역사적인 보궐선거를 성공리에 치른 점을 감안, 서방 측에 대(對) 미얀마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아세안 정상들의 이런 입장을 우선 유럽연합(EU)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가 대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미얀마에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부과했다.
- 정상들은 또 핵안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관련기구들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설치키로 했다. 성명은 아세안 정상들이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면서 이를 통해 핵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내 핵 관련 현안의 정보공유와 투명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 정상은 또 2015년까지 불법 마약의 생산과 가공, 거래, 이용 등을



일소하기 위한 선언문을 공식 채택했음. 정상들은 이때까지 마약 없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당부처 각료들이 관련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토록 하기로 했음. 훈센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까지 위대하고도 긴밀한 공동체를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수많은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면서 "이번 20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 日 '독도는 일본땅' 외교청서 내일 발표(4/5)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6일 발표함. 5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한 뒤 외무성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임.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일본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음.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일본 정부가 최근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청서가 발표되면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를 내놓을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또는 8월에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日외교청서 "그릇된 역사인식 깊은 유감"(4/6)

- 정부는 6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한데 대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음.
-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 혔음. 조 대변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측에 촉구했음.
- 논평은 또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街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음.

나. 미·러 관계

● "美, 러시아 민주화 단체 지원은 큰 문제"(4/3)

- 러시아 정부는 2일 미국이 러시아 내 민주화 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런 재정 지원 활동은 양국 관계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러시아의 이런 불만 사항에 대해 양측이 논의에 들어갔으며, 러시아 내 어떤 조직이 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측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라브코프 차관은 그러나 다음 달 7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세 번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이런 문제는 양국 관계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 규모는 꽤 크다"고 말했음. 푸틴은 미국이 민주화 관련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신의 3선을 반대하는 시위를 부추겼다며 비난해왔음.
- 러시아 TV방송도 2개월 전 부임한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 대사가 반푸틴 운동 단체 회원들과 회동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이에 대해 맥폴 대사는 러시아 내 민주주의 확산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외교의 양대 축이라고 주장했다.

● 러 외무 "맥폴 주러 美 대사 발언은 오만" 비난(4/4)

-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적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추진하는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한 맥폴 대사의 발언을 "오만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음.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해 모스크바국립대(MGU) 현지 분교에서 강연하면서 "어제 우리 동료인 미국 대사가 (유럽) MD와 관련 어떤 변화도 없을 것



이라고 아주 오만하게(arrogant) 말했다"면서 "대사는 해당국(러시아)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했다"고 꼬집었음. 라브로프는 맥폴 대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부러 영어 단어 'arrogant'를 사용했음. 러시아 언론매체들은 이 단어는 외교적이지 않은 뉘앙스를 품은 단어로 라브로프 장관이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음.

- 맥폴 대사는 하루 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을 실질적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MD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동맹국 국민의 안전은 우리의 중요한 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 미국과 나토는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음.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반발하며 유럽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나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음.
- 맥폴 대사의 발언은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기존 계획대로 유럽 MD 구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이같은 강경한 어조에 라브로프 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것임.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맥폴 대사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러시아 외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맥폴 대사가 지난 1월 러시아로 부임한 이후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방송 NTV 기자 등이 즐기치게 대사를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불만 표시였음.
- 양국은 앞서 미국의 러시아 비정부기구(NGO) 재정 지원 문제로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음.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내 비정부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양국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라브코프 차관은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 내 일정 단체와 기구들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여러 차례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음.
- 이같은 지적에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NGO와의 협력과 비제도권 야권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맞받았음. 눌런드는 그러면서 러시아 시민사회 강화와 인권 보호, 자유언론확대 등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음. 러시아의 우려 표명에도 미국이 반(反)정부 성향의 러시아내 NGO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임.

● 러 외무부 "부트 귀환 위해 최선다할 것"(종합)(4/6)

-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미국 법원이 '죽음의 상인'으로 알려진 러시아인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4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그의



- 고국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는 6일(현지시간) 부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재판이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부트의 귀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보실 명의의 성명에서 "부트에 대한 25년형 선고는 근거가 없고 편향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태국에서 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참여한 부트 체포와 추방의 불법성 및 증거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은 명백한 정치적 주문을 이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변론과 부트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호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이어 "선고 이전부터 부트는 미국 당국에 의해 '죽음의 상인', 국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혔으며 혐의 자체도 전적으로 그에게 덮어씌운 '범죄의도'에 근거해 조작됐다"면서 "뒤이어 견디기 힘든 수감환경과 육체적,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부트로부터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외무부는 또 재판 과정을 필요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배심원단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전개된 미국 언론의 비방 공세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무부는 "부트를 조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국제법적 메커니즘을 이용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 문제는 러-미 관계에서 최우선 의제에 올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트의 변호사가 추진할 항소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든 부트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쉬코프는 "두마는 부트 귀환을 위한 외무부와 행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 미국 측과의 가능한 협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뉴욕 남부법원은 하루 전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판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근거해 부트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합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다. 미·일 관계

● 日후텐마 초등교 미군기 소음 전동차 통과 수준(4/2)

- 일본 오키나와(沖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주변의 초등학교에서 들리는 미군기 소음이 전철이 통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오키나와 류큐(琉球)대학의 조사 결과 후텐마 기지에서 미군기의 이착륙 시 인접한 후텐마 제2초등학교 교실 내 소음이 100데시벨(dB)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철이 고가철도를 지날 때 바로 밑에서 감지하는 소음 수준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움.

- 미군기의 학교 주변 통과 시 교실에서 방음 효과가 높은 창을 닫을 땐 66.9 데시벨, 창을 열 경우엔 99~105데시벨의 소음이 감지됐음. 문부 과학성의 매뉴얼에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평균 목소리 크기를 65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음.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데시벨 정도임.
-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99년 학교와 인구밀집 지역 등에 대한 비행 규제가 포함된 '항공기 소음 규제조치'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과 일본은 후텐마 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감안해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현외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음.

● 美, 日에 후텐마기지 보수비 8년치 요구(4/5)

- 미국이 오키나와(沖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보수비를 8년치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최근 열린 일본과의 주일 미군 재편을 위한 협의에서 올해부터 8년간의 기지 보수비로 약 250억엔(약 3천400억 원)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음. 하사관 막사 건설과 비행장의 활주로 정비 등을 위해 일본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보수를 할 경우 기지의 고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로 이전 작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임.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이 오키나와의 반발로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기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8년치 보수비를 한꺼번에 지원할 경우 기지의 고정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한다는 방침임. 일본은 1996년 미국과 후텐마 반환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기지 보수비로 약 16억 엔을 부담했음.

라. 중·일 관계

● 中, 日에 동중국해 환경분야 공동사업 제안(4/2)

-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환경분야 공동사업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음. 이 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일본에 영유권과 가스전 개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해양환경 보호분야'의 공동사업을 제안했으며 일본도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방침임.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끼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협력 자세를 보인 것은 일본 측의 대(對) 중국 불신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이런 제안은 오는 7~8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개최 예정인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거론될 전망이다. 해양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중국은 센카쿠 부근에서 해양조사선에 의한 순찰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 지난달에도 중국 경비선이 일본 영해에 침입하는 등 영유권 문제에 강하게 나오고 있어 양국의 해양환경 분야 공동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함.

- 양국은 우선 해양생태계 연구 등에서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해양분야 공동사업을 계기로 중단된 가스전 개발 관련 조약체결 협상의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중일 양국은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에서의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한 고위 실무급 해양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었음.

● 中-日 재무, IMF 추가출연 공조 합의(4/8)

- 중국과 일본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 출연하는 문제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이 7일 밝혔다. 아즈미 재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세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두 나라가 IMF 추가 출연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19~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 때까지 일본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MF-세계은행 춘계 연차 총회에 앞서 열리는 G20 회동에서는 IMF 추가 출연 문제가 최대 의제로 다뤄질 예정임. IMF는 유로 위기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을 5천억 달러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임. 그러나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돈을 더 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혀왔음.
- 아즈미는 "유로 위기가 심각한 국면을 넘기기는 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안심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아시아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 도쿄 회동에서는 두 나라가 서로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문제와 달러가 아닌 엔과 위안화로 결제하는 무역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가 이뤄졌음. 또 G20과 '아세안+3'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한국, 일본) 구도에서 두 나라가 전술적 측면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됐음.

마. 기 타

● 日 6자대표 "北로켓 대응 비상조치 논의"(4/3)

-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일 (현지시간)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장거리로켓 발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단행할 '비상조치(contingency measures)'에 대해 미국측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대표인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혀 사실상 이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했음. 그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미 당국자들과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이는 앞서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과 관련,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후속 조치(next steps)'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 그는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북한에 대해 로켓발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일·미 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사 중단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 스기야마 국장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자 협의 계획에 언급, "현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들이 만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이날 미·일 협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사찰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음.
 - 스기야마 국장은 이날 데이비스 대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클리포트 하트 미 6자회담 특사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나 북 로켓발사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음.
- "아세안+韓中日 FTA 교섭 이르면 연내 개시"(4/4)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연내 시작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사이신문이 4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채택할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안은 "작년 이후의 아세안을 중핵으로 한 새로운 광역 FTA 창설을 위한 진전을 평가"하고 "올해 11월에 열리는 차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명기했음. 현재 이 광역 FTA에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임. 이들 국가의 인구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의 27%를 차지함.
 - 아세안이 역내 광역 FTA에 적극적인 것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음. TPPA는 관세의 전면 철폐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FTA여서 신흥국과 후진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모두 여기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아세안으로서는 관세 철폐의 예외와 유예 조치를 넉넉하게 둘 수 있는 낮은 수준의 FTA가 절실함.

-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각국의 이해가 갈리면서 협상에 많은 시간이 걸려 타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러 "北 로켓 발사시 국제사회 대응조치 취해야"(4/4)

- 북한이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4일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벅쇼 고로 일본 외무차관과 전략문제에 대해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러한 (북한의)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 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북한에 준 신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획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코프는 "감정적 대응을 허용해 새로운 대결 국면을 초래해선 안되겠지만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 일본측과 긴밀히 논의했으며 양국간에 근본적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당시 러시아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군사적 성격의 미사일이든 민수용 로켓 운반체든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로켓 발사가 민수용 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음.
- 한편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이란 핵문제와 관련 "상황이 우려스런 방향으로 전개돼 가고 있으며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협상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에 대화 재개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국가들과의 접촉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美 "국제사회에 北 위성발사 참관거부 촉구"(4/5)

-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국제사회에 참관단 파견 등 어떤 대응도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참관 초청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어떤 참관단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참관단을 파견하는 것은 국제의무를 노골적으로 위



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의 요청을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내달 중순 미사일 발사에 국제참관단을 초청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왔듯 이번 계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이는 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사실상 미사일 시험 발사 목적으로 규정,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도 이에 보조를 맞출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됨.
-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우주국(NASA)은 물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국(ESA), 러시아 연방우주청 등은 북한의 위성발사 참관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외국 전문가와 기자들에게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현장과 실태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日 "北 핵·미사일 개발 국제사회에 위협"(4/6)

- 일본이 올해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교청서는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우리 눈 농축활동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은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음. 북한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경제면에서 여전히 어렵고, 도발 행위에 의해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음.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후 김정은 체제에 대해 "예단을 불허한다"면서 "향후 주시해 나가겠다"고 했음.
-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의 강화와 자국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활동 활발화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다"고 비판했음.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 대두와 관련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변동에 의해 국제사회의 기존 의사 결정 방식이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어 "신흥국으로부터도 참가와 공헌을 얻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中, 北 미사일 안보리 결의위반 인식 불투명"(4/8)

- 일본 언론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NHK방송은 8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임 이사국인 중국도 각국과 보조를 함께해 북한에 엄중하게



-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 이 방송은 하지만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사태의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을 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 외교부장은 "대국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도록 각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북한을 자극해 사태가 복잡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중국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음.
- 교도통신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에 언급했으나 중국은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음. 마이니치신문과 후지TV 역시 한중일 3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외교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최후까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한국·일본과 온도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회담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과 관련 "3개국이 공통 인식을 늘리기는 했지만 모든 것에 일치한 것은 아니다"고 한계를 인정했음.

● <日, 北 미사일 발미 '은근슬쩍' 무장 강화>(4/8)

-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발미로 은근슬쩍 무장을 강화하고 있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오키나와(沖縄)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등 동중국해 쪽의 군사력을 보강했음.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있는 동중국해의 방위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의 궤도와는 관계없는 도쿄 중심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 대(對) 국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음. 이미 자위대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요격 명령을 발령해 놓고 있음.
- ◇ 도쿄에 패트리엇...오키나와에 대규모 자위대 배치 =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인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부대를 오키나와에 처음으로 대규모 배치했음. 또 오키나와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등의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에 자위대 약 700명을 파견했음. 배치 병력은 오키나와 본섬 200명, 미야코지마 200명, 이시가키지마 450명,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 50명 등임.
- 요미우리신문은 오키나와와 주변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위대 부대를 기지 이외에 배치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패트리엇 미사일도 오키나와 본섬 2개소와 이시가키지마, 미야코지마 등 모두 4곳에 배치했음. 일본 방위성의 와타나베 슈(渡邊周) 부대신(차관)은 지난 7일 오키나와의 경계태세를 시찰한 자리에서 "이시가키지마를 거점



으로 처음으로 자위대 시설 밖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면서 "미사일 파편의 낙하에 대비해 요사구니지마에 구조부대를 대기시키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미사일 파편 낙하시의 패트리엇 요격 태세와 관련 "명중률 80%를 넘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도 했다.

- 방위성은 수도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도 3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 도쿄의 중심부에 있는 방위성 내에도 패트리엇을 배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가 수도권 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외부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과 무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임.
- ◇ 주민, 오키나와 재무장에 경계 = 오키나와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무모하게 저항하면서 주민들을 전쟁에 끌어들이 엄청난 희생자가 생긴 곳임. 따라서 군대의 주둔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감이 뿌리 깊음. 일부 주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군대 주둔을 환영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요나구니마치의 한 의원(54)은 "이번엔 안전보장 문제라 주시할 수밖에 없지만 부대의 배치가 너무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자위대를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군과 동일시하는 것임.
- 하지만 일본은 이미 2010년 12월 각의에서 결정한 신방위대강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동중국해의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력 강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방 예산에 요나구니시마에 육상 자위대의 연안감시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용지 취득비를 계상했다. 기미즈카 에이치(君塚榮治) 육상자위대 막료장(참모총장)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안전, 안심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北 로켓 우려' 한 목소리 낸 한·중·일 외교>(4/8)

- 북한이 오는 12~15일 사이에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외무장관들이 한 데 모여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 8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간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임. 중국 정부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안보 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발사를 강행하면 서울, 베이징, 유엔에서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자며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 할 뜻을 밝혔다.
- 앞서 7일 열린 한중 양자회담 과정에서 양 부장은 중국이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에 이른바 '위성' 발사를 강행하지 말 것과 발사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전달하고 있으며 발사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과 관련해 안보리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 등 일방적으로 '북한 감싸기' 행보를 보여온 것과는 다소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임.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거나 한국, 일본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번 양자회담이나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말들도 원론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심을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국의 이 같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임.
 - 북한은 이미 평양 인근의 신음동 로켓 연구소에서 제작한 부품을 지난 달 23일 동창리 기지로 옮겼으며, 10여 일간 건물 안에서 추진제 점검과 함께 1~3단계 추진체에 대한 최종 조립을 마친 상태임. 이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기 위한 발사체 최종 조립단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며, 기상상태를 고려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5일 전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게 정보당국의 전망이다. 한·중·일 외무장관들이 '발사 후'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임.
 - 결국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은 불가피해 보임. 어떤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도 해서는 안된다고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또 안보리 논의를 반대할 개연성이 있었던 중국이 유엔에서의 대화를 얘기한 것은 발사 직후 소집 가능성을 높게 하는 대목임.
 - 하지만, 유엔 논의가 북한에 실효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미 대북 제재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모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제재 방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도 막상 안보리 논의에 들어가면 기존의 북한 편들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양 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당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엔에서 중국이 취하게될 입장을 미리 언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